

# 나주시의회 “광주쓰레기는 광주서 처리”

### 광주권 생활쓰레기 고행연료 1일 400t...나주 반입 반대 입장

### 나주시의회 “도시 간 갈등 유발...쓰레기 떠넘기기 중단해야”



4일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 현지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4일 이웃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쓰레기 문제로 도시 간 다름과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며 “각자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 15명은 의회 버스로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나주시의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광주권 SRF 나주 반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전날 광주광역시의회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방문 목적 등 알리고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김 의장이 면담을 사실상 거부해, 로비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의회사무국에 입장문만 전달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이웃도시 의원들이 광주권 쓰레기 때문에 불거진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만 광주광역시의회

를 비롯해 단 한 명의 의원도 만날 수 없었다”며 “전남과 상생하자는 광주시의 외침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불의에 항거하고 옳지 않았던 것에 함께 행동했던 광주 정신에 입각해 광주쓰레기는 발생지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원들의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은 1일 400여에 육박하는 광주지역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행연료(SRF)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계획이 알려진 후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3년 넘게 집단반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주민 반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열병합 보일러 대신 3년 넘게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광주시는 쓰레기가 아닌 공산품(연료)을 나주혁신도시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온갖 유해성분이 가득한 생활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는 무늬만 연료이지 사실상 쓰레기를 압축한 덩어리에 불과하고, 연료사용이 아닌 대규모 ‘쓰레기 소각’이라며 반입 중단과 SRF 발전 설비 매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한 갈등 해결을 위해 SRF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협의체가 꾸려져 지난 1년 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해결점을 찾는 듯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이 집단난방 연료를 SRF 대신 100% LNG를 선택할 경우 기존 SRF 시설 매몰처리에 따른 천문학적 인 손실보존 비용 마련과 부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범시민대책위가 거버넌스를 탈퇴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손실보존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발전소가 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나주시의원들이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했는데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사실상 면담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는 “나주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들어 오는 11일 면담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방문을 강행하는 바람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총선 당내 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 50대 집유

법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기관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여론조사기관 대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 인터넷 신문으로부터 4·15총선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월 20일 조사 결과값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응답 건수를 삭제하거나, 60대가 응답한 건수를 18·19세 또는 20대가 응답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 결과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고 보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론조사 등록·공표 기준인 ‘가중값 배율’(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율과 실제 응답자의 각 해당 비율 사이의 차이를 용인해주는 범위)을 충족하기 위해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원본(6개월 의무 보관)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측의 자료 제출 요구에 3차례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두루 위반, 죄질이 불량하다. 판세를 왜곡시켜 전담한 책임을 가법 재판 볼 수 없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교통사고...1명 의식불명

3일 오후 6시23분께 전남 보성군 조성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량이 도로공사 중임을 알려주는 ‘사인카’를 추돌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순천소방, ‘진드기 쯤쯤가무시증 주의하세요’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쯤쯤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쯤쯤가무시증은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가을철이 시작되는 9월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쯤쯤가무시증에 감염되면 보통 1~3주의 잠복기를 가지는데,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고 근육통, 복통, 인후염이 동반된다.

특히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되는데 최근에는 가피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때,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숲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후엔 몸을 꼼꼼히 씻어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광양경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추진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광양시·한국전력 광양지사와 협업체로 광양읍 예구마을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구마을은 대부분 원룸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근에 한려대·보건대 및 종합쇼핑몰인 LF스퀘어가 있어 여성 1인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광양경찰서는 예구마을을 진·출입로로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하고 광양시·한국전력과 협업, 다양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 중이다.

특히 마을 초입에 위치한 고인물 유적지는 나무가 울창하고 어두워 마을 주민이 통행하기를 꺼려해, 출입차단시설인 펜스를 설치하고 태양광LED 조명등을 달아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주 아파트 개발사업 난무...무리한 학교 증축 이어져”

### “교육·재정적 피해...빈교실 늘어날 개연성 높아”

광주 도심 곳곳에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어지는데 따른 무리한 학교 증축으로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금 사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했다.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학교 증축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과 관리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만

2531명(증감률 14.7%)이 감소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만3947명(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시민모임은 “외부 인구 유입은 없이 주로 지역 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미희기자

## 성폭력피해 의뢰인 추행 국선변호사 검찰 송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을 추행한 국선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의뢰인에게 성적 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로 국선변호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광주 지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입증,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오유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